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5. 7. 15.(화) 16:00
(지 면) 2025. 7. 16.(수) 조간

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국비 8조 1,000억 원 신속 교부

-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국비 8조 1,000억 원 지자체 교부
- ‘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(1670-2525)’ 7월 18일(금) 개소 예정

□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5일(토)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비 8조 1,000억 원을 신속히 교부하는 한편, 국민 문의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월 18일(금) ‘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’를 개소한다고 밝혔다.

□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총 12조 2,000억 원 중 8조 1,000억 원을 7월 15일(화)에 신속히 교부해, 지방자치단체가 추경 성립 전에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.

○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로 부담하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른 조치로, 행정안전부는 통상적인 시점을 크게 앞당겨 국비 자금을 조기 교부하고, ‘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’ 지침*을 전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했다고 밝혔다.

* 「지방재정법」 제45조에 따라 추경 성립 전에도 예산 집행 가능

□ 한편,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국민 문의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해 ‘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(1670-2525)’를 오는 7월 18일(금) 개소할 예정이다.

- 전담 콜센터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‘정부민원안내콜센터(국민콜110)’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·지급 방식,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.
- 아울러,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국민이 주로 궁금해하는 사례들을 모아 ‘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’을 배포할 예정이다.
-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“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재정이 투입되도록 했다”며,
- “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개시일이 다음 주(7.21.)로 다가온 만큼, 현장 집행과 민원 대응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민생쿠폰의 원활한 지급에 만전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수경 (044-205-3702)
		담당자	서기관	조석훈 (044-205-6071)



참고

「민생회복 소비쿠폰」 10문 10답

1.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1차 지급 대상이 되는지?
반대로,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되는지?

□ 기준일 이후 출생한 경우

- 기준일('25.6.18.)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
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다만, 이의신청은 기간 내('25.7.21.~'25.9.12.)에 요청하여야 하므로,
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
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□ 기준일 이후 사망한 경우

- 기준일('25.6.18.)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
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나,
-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,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* 세대주가 신용·
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·카드형 지역
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.

* 세대주가 동일 세대 미성년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하는 점 고려

2. 대리 신청도 가능한지?

□ 기준 및 방법

-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께서는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- 다만, 직접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법정대리인,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,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·비속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시어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 센터에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< 대리인 유형별 필수 지참서류 >

대리인 유형	증빙서류
①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	① 대리인 신분증
②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'동거인' 제외)	②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③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 가능한 서류(예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)
③ 지급대상자의 (동일 세대원이 아닌)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	① + ② + ③ + ④(지급대상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)

3.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?

□ 배경

- 이동이 제한되는 군인의 복무 특성을 고려하여, 일반 국민과 동일한 신청 방식 외에도 의무복무 군인의 편의 제고를 위한 신청·사용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
□ 나라사랑카드 → 군마트 PX 사용 허용

- 우선, 군인 본인이 신청·사용하는 경우, 나라사랑카드*로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전국 군마트(PX)를 사용처에 추가하였습니다.

*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시 발급되어 전자신분증(전자병역증/전역증), 전자통장(계좌), 체크카드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카드

□ 우편신청 허용

- 또한, 군인 본인이 오프라인으로 신청·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접수한 지자체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발송(등기 우편)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.

□ 대리신청 요건 완화

- 군인이 대리 신청을 원하는 경우, 군인과 대리인 간에 위임장을 우편으로 주고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위임장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.
-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위임장 사진과 함께 현역병이 부대 내에서 발급 가능한 '현역복무확인서'를 사진으로 함께 제시하면 대리 신청·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4. 요양병원·시설에 계신 국민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?

□ 신청 방식

- (형제·자매 대리신청) 요양병원·시설에 입소 중인 국민께서는 일반적인 본인 신청 및 대리신청* 외에, 예외적으로 형제·자매도 대리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* 대리인 범위 :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,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('동거인' 제외), 지급대상자의 (동일 세대원이 아닌)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

- (대리신청 방법) 요양병원·시설에 계신 경우 위임장 작성이 곤란하신 점을 고려하여 대리신청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.

- 대리인께서 ①대리인 신분증, ②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, ③요양병원·시설 입소사실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□ 찾아가는 신청

- 이외에도, 고령자·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'찾아가는 신청'을 운영할 계획입니다.

※ 구체적인 운영 일정 및 운영 방식 등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요

- 요양병원·시설에 계시는 국민께서 필요한 경우 '찾아가는 신청'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적극 홍보·안내하겠습니다.

5. 6월 18일 이후 서울에서 인천 강화군(농어촌 인구감소지역)으로
이사한 국민이 사용지역 변경을 할 수 있는지?
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금액도 받을 수 있을지?

□ 신청·지급 전 변경

- 기준일 이후 이사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, 온·오프라인*을 통해 신용·체크카드 신청 시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고,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·선불카드 신청도 가능합니다.

* (온라인) 카드사 홈페이지·앱·콜센터ARS, 카카오뱅크·카카오페이·네이버페이·토스(뱅크) 앱 등,
(오프라인)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방문 등

□ 신청·지급 후 변경

- 이미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이후라면, 지급수단에 따라 변경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.
 - 신용·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경우는 온·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사용지역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.
 - 이사 전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이 불가능합니다.

□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

-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인천 강화군으로 이사하는 경우, 이의신청을 통해 인천 강화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류형·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 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단, 비수도권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시는 경우, 차액에 해당하는 2만원만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
6.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구체적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?
6월 18일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된 경우 소비쿠폰
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?

□ 취약계층 자격 기준

- (법정 차상위계층)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 대상자,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, 차상위 장애수당 등*의 수급자, 차상위 계층 확인사업 대상자가 해당되고, 1인당 30만원을 지급합니다.
* 차상위 부가급여(장애인 연금), 차상위 장애 수당, 중증·경증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자
- (한부모가족)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가구가 해당되며, 1인당 30만원을 지급합니다.
- (기초생활보장수급자)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격이 책정된 경우 해당되고, 1인당 40만원을 지급합니다.

□ 기준일 이후 자격 변동

- 기준일 당시 취약계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지만, 이의신청 기간 ('25.7.21.~'25.9.12.) 내 취약계층에 새롭게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통해 각 자격별 소비쿠폰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
7.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?

세대주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지급받는지?

□ 미성년자 본인 신청·지급 요건

- (기준)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·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,
 - 주민등록 세대 내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, 세대주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 한해 본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
< 본인신청·지급 요건 예시 >

- ① 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
- ② 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표상 '동거인' 또는 '거주불명자'인 경우
- ③ 세대주가 해외체류자로서 지급대상 제외된 경우 등

- (방법) 본인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,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지역사랑상품권·선불카드를 수령하거나 체크카드*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* 카드를 통해 보유 중인 카드에 소비쿠폰 지급이 가능한 지 우선확인 필요

□ 세대주와 분리된 미성년자의 경우

- (양육자 변경) 이혼·별거 등으로 자녀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신청·지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(보호시설 거주) 미성년자가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로서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, 시설장이 대리신청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해당 미성년자의 소비쿠폰을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수령한 경우, 환수조치 예정

8. 소비쿠폰으로 마트나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싶은데,
사용가능 매장과 불가능한 매장이 어디인지?

□ **대형마트·백화점**

-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**대형마트**(이마트, 롯데마트, 홈플러스 등)와 **백화점**은 모두 사용이 불가합니다.
- 다만, 대형마트·백화점에 입점한 **임대매장**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**점포**(미용실, 약국, 꽃집 등)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.

□ **기업형 슈퍼마켓(SSM)**

- 기업형 슈퍼마켓도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사용이 불가합니다.
 - 기업형 슈퍼마켓이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상 준대규모 점포로서 규제(영업시간 제한, 의무휴업 등)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, 영세상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점* 등을 고려하여 사용처에서 제외하였습니다.
- * SSM은 편의점 등 타 프랜차이즈 업종과 달리 전통시장 1km 내 점포 등록 제한

□ **편의점**

- 프랜차이즈 편의점(CU, GS25, 세븐일레븐, 이마트24 등)의 경우, 직영점은 사용 불가하나,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가능합니다.
 - 직영점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장으로,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고 지역제한 적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제외하였습니다.
 - 가맹점은 지역 자영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므로,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이라면 소비쿠폰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덧붙여, 편의점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취지에 맞지 않는 **고가제품**을 구매하는 사례(대기업 전자제품, 골드바 등)가 발생하지 않도록,
 - 소상공인연합회 및 편의점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고가제품 판매 자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.
 - 국민 여러분께서도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게 대기업 또는 외국에서 생산된 고가제품 구매를 자제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

9. 키오스크,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사용이 불가능한지? 배달앱 사용도 일체 불가능한건지?

□ 키오스크 및 테이블 주문 시스템

-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통상 결제대행사(PG: Payment Gateway)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,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이 제한*될 수 있습니다.

* PG사 본사 매출로 집계되어 소비가 실제로 이루어진 업체의 매출액·지역 확인 불가

- 국민께서는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를 이용해주시기를 요청드리며, 매장 점주께서도 해당 내용을 국민께 정확히 안내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.

□ 배달앱 이용

- 배달앱의 경우에도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불가하여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하나,
 -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.

10. 개인택시, 버스, 지하철 이용 불가능한지?

☐ 택시

- (개인택시) 택시 면허등록증 상 차고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한다면, 사용 가능합니다.
- (법인택시) 법인 소재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지역에 해당하고,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라면 사용 가능합니다.

※ 지역사랑상품권은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택시에서 사용 가능

☐ 버스·지하철

- (선불교통카드) 선불교통카드(티머니 등) 기능이 일반카드에 내장되어있는 경우에도, 교통결제는 별도 계좌에서 충전액이 차감되므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.
- (후불교통카드) 교통요금 후불 결제는 사용불가 업종 중 '카드 자동이체'에 해당하여, 사용 불가능합니다.